

#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

# 목 차



**1** 전부개정 추진경과 및 제안이유

**2** 업종공통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**3** 제조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**4** 건설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**5** 기타사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## 참고 사항

# 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

 근로기준법 제정(1953.5.10. 제6장 안전과보건에 규정)

 위험방지, 안전장치, 감독상의 행정조치 등 10개 조문

 28년간 동법으로 시행하다가 산안법 제정 후 분리

 산업안전보건법 제정(1981.12.3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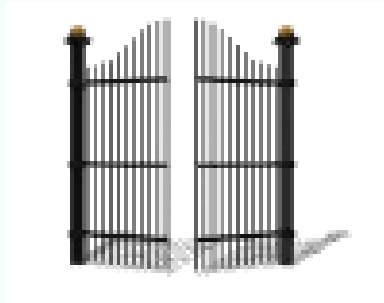
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김집의원 외 35인 발의(1981.11.29)

 산업안전보건법 총35차례 개정(1990.1.13. 전부개정)

 90년대 9차례 → 00년대 17차례 → 10년대 9차례 개정

 전부개정안 국회통과(2018.12.27) → 공포(2019.1.15)

# 사어아저보거법 전부개정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



# 추진 배경

## 산안법 전부개정 추진배경

-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수 연간 천여명 발생
- 노동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2~3배 수준
-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(사고+질병) 22조원 규모(2018년도)
- **자연재해 손실액**(17년, 피해액+복구액=6,870억원)의 **32배**(2017재해연보, 안행부)



# 추진 경과

## 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부개정 추진

### 전부개정안 입법예고(18.2.9) 前

###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노사·전문가 등 의견수렴(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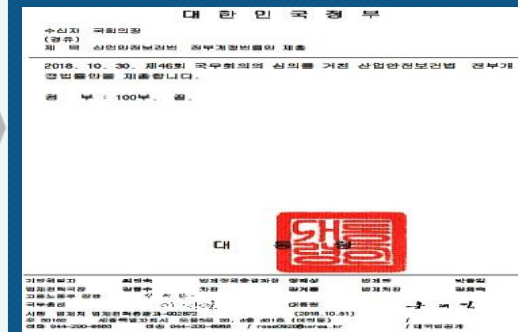
### 전부개정안 입법예고(18.2.9) 後

### 노사·전문가 등 의견수렴(21회), 규제심사(18.7.13), 법제심사(18.10.23)

#### 공청회(18.3.27)



#### 국회제출(18.11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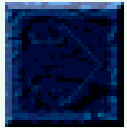


#### 개정안 공포(19.1.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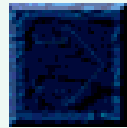


## 제안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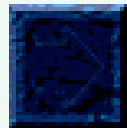
## 산안법 전부개정안 제안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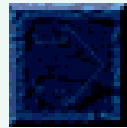
**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 보호대상 포함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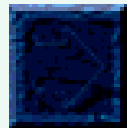
**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**



**도급작업 등 유해 · 위험작업 도급금지**



**유해 · 위험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신뢰성 강화**



**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**

## 체계 개편

## 산안법 체계 개편사항

- 법의 장·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
-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(관리책임자 자격·권한, 건강진단 종류 등)
- 법률 위임근거 명확화 등 법 조문 전면 재배열





# 체계 개편

# 산안법 체계 개편사항



제1장 총칙	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	제3장 안전보건 관리규정
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	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	제6장 감독과 명령
제6장의2 산업안전·보건 지도사	제8장 보칙	제9장 벌칙

개정 전

제1장 총칙	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	제3장 안전보건 교육	제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
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	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	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	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
제9장 산업안전· 보건지도사	제10장 근로 감독관 등	제11장 보칙	제12장 벌칙

개정 후

# 체계 개편

## 산안법의 새로운 장·절 체계

### 제2장

안전보건  
관리체제 등

-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
-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

### 제5장

도급 시 산업  
재해 예방

- 제1절 도급의 제한
-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-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
-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

### 제6장

유해·위험  
기계 등에 대한  
조치

- 제1절 유해·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
- 제2절 안전인증
-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
- 제4절 안전검사
- 제5절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등

### 제7장

유해·위험 물질에  
대한 조치

- 제1절 유해·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
-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

### 제8장

근로자  
보건 관리

-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
-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

# 어조 공통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

## 법의 적용대상 확대(시행일 : 2020.1.16)

 보호대상 확대: 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 등장
-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
-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캐디, 학습지 교사, 화물트럭 기사 등  
특고와 플랫폼 이용의 배달종사자 등 법 보호의 **사각지대** 발생

## 개정 전(제1조)

이 법은 산업안전 · 보건에 관한 기준을...<중략>...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·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개정 후(제1조)

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...<중략>...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·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업종 공통

## 정의 규정 개정(제2조)

 정의를규정을 통해 집행의 일관성 확보(시행일 : 2020.1.16)

 도급, 발주자, 산업재해 등 개념정의 명확화

### 산업재해

-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...<중략>

### 중대재해

-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...<중략>

## 업종 공통

## 정의규정 개정(제2조)

### 사업주

-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

### 도급

-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· 건설 ·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

### 도급인

- 물건의 제조 · 건설 ·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. 다만,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

## 수급인

-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· 건설 ·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

## 관계수급인

-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

## 건설공사 발주자

-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· 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. 다만,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



## 건설공사
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
-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-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-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



 적용범위 “사업” 으로 통일(시행일 : 2020.1.16)

 사업 또는 사업장을 “사업” 으로 **약칭하는 규정 삭제**

☞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종속변수

➡ **적용 범위의 원칙**을 “사업” 단위로 통일함

 국가·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법 적용되므로 **별도 규정 삭제**

## 개정 사유(배경)

법 적용을 둘러싸고 **상당한 혼란**이 초래되고 있고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용어정리가 필요하고, 공기업이 아닌 **공공기관**은 법 적용 배제 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

## 사업

-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**경영**함. 즉, 상법상의 상행위와 유사한 개념

## 사업장

-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**장소**.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곳

## 도급인의 사업장 명확화(시행일 : 2020.1.16)

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를 명확히 규정

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로 문구 명확화

### 개정 사유(배경)

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장소 확대 필요

# 업종 공통

##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(제10조)

### 개정 전(제9조의2)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[하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...<중략>...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 ...<이하 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10조)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(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중...<중략>...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..<이하 중략>...



적용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

## 업종 공통

##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신설(제14조)

 안전 ·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(시행일 : 2021.1.1)

 이사회 승인된 안전 ·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히 이행 의무 부과

### 신설 사유(배경)

- 기업의 안전·보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
-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,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절감을 통한 **이윤추구 방지** 필요
-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(위반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14조)

-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**대표이사**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**이사회**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...<중략>...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**성실히 이행** 하여야 한다.
- ③ ...<중략>...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**비용, 시설, 인원**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 ■ 법령요지 외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의무(시행일 : 2020.1.16)

■ 現 총칙에서 제4장 “유해 · 위험방지조치” 로 조문 이동

■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성

■ 現 시행규칙상의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을 법으로 상향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사업주의 게시의무 사항이 **이원적**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악하기 곤란하고 중요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하위법령에 규정  
(게시 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/통지의무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)



## 업종 공통

## 법령요지 등의 게시(제34조)

### 개정 전(제11조)

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.···<이하 중략>

### 개정 후(제34조)

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**안전보건관리규정**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

## 개정 전(제11조)

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...<이하 중략>

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
3.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
4.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규정된 사항
5.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


## 개정 후(제35조)

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...<이하 중략>

1. 좌동
2. 안전보건진단 결과
3.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
5. 물질안전보건자료 관한 사항
6.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

## 근로자 참여 규정 상향 등 조문 정리(시행일 : 2020.01.16)

 고시에 규정된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

 조문정리: 위험성을 결정하고 →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위험성을 결정하고 문구에 대한 의미가 모호
- 위험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**선행**하도록 조문 위치 배열

## 업종 공통

## 위험성평가의 실시(제36조)

### 개정 전(제41조의2)

①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...<이하 중략>

### 개정 후(제36조)

①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**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**하고...<중략>...

②...<중략>...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**근로자를 참여**시켜야 한다 ...<이하 중략>

## 업종 공통

## 안전보건진단 및 진단기관 개정(제47조, 제48조)

 진단결과 제출의무 등을 법으로 상향(시행일 : 2020.1.16)

 사업주의 진단의무와 진단기관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구분

 진단대상 : 추락·붕괴 등 **고위험 사업장**을 법으로 상향

 진단명령 받은 경우 사업주가 진단을 의뢰토록 법에 규정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진단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포괄위임되어 있어  
법률에서 대상 사업장 예측 곤란
- 진단 실시일이 사업주와 진단기관 간 계약에 의해 정해져  
진단 결과 **제출 시점이 불명확**

# 업종 공통

## 안전보건진단(제47조)

### 개정 전(제49조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..<이하 중략>

### 개정 후(제47조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**추락 · 붕괴, 화재 · 폭발**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**누출**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**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**에게 제 48 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# 업종 공통

## 안전보건진단(제47조)

### 개정 전(시행규칙 제130조)

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...<중략>...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개정 후(제47조)

②...<중략>...안전보건진단기관에 **안전보건진단을 의뢰**하여야 한다.

③ <생략>

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**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**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업종 공통

#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및 계획서 제출 개정(제49조, 제50조)

 개선계획 대상사업장 범으로 상향 등(시행일 : 2020.1.16)

 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과 제출 등을 조문 구분

 일정규모 이상의 **직업병 발생 사업장**을 범으로 상향

 개선계획서의 제출과 관련된 위임근거를 법에 규정

## 개정 사유(배경)

- 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이 법 외에 하위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한번에 파악이 곤란
- 개선계획서 제출은 법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 등에 관해 법에 위임근거 마련 필요





## 개정 전(제50조)

- ① …<중략>…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을 명할수 있다.
1.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 사업장
  2.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  3.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
- ② …<중략>…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
…<중략>…

## 개정 후(제49조)

- ① …<중략>…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수 있다. …<중략>…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…<중략>
1. 좌동
  2. 좌동
  3. …<중략>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
  4.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

##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(시행일 : 2020.1.16)

-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 
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
-  합리적 이유 있을 때 대피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

### 개정 사유(배경)

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 조치  
우려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규정

## 개정 전(제26조)

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개정 후(제52조)

-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- ② <생략>
-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작업중지명령 요건 및 대상의 법적근거 명확히 마련(시행일 : 2020.1.16)

 작업중지 대상: 중대재해가 발생한 **해당작업, 동일작업**

 화재 · 폭발 · 누출, 건축물 붕괴 경우는 **사업장 전체**

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

## 개정 사유(배경)

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작업중지의 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강제적 성격에 맞게 요건과 해제 절차를 규정할 필요(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/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# 개정 전(제51조)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**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·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## 개정 후(제55조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...<중략>... 해당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
2.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

② ...<중략>... 토사·건축물의 붕괴, 화재·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...<중략>...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**확산**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**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**할 수 있다.

 **원인조사는 예방대책 수립 목적(시행일 : 2020.1.16)**

 **원인조사는 작업중지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**

 **현장 훼손 외 다른 원인조사 방해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**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원인조사와 작업중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원인조사 방해 행위를 현장 훼손만 규정(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/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 업종 공통

##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(제56조)

### 개정 전(제26조)

④ ...<중략>...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...<중략>...

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개정 후(제56조)

① ... <중략>...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.

## 업종 공통

#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개정(제63조)

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강화(시행일 : 2020.1.16)

 도급인 사업장,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장소 중 지배·관리 장소

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하위법령인 “안전보건규칙” 을 따르도록 함


## 개정 사유(배경)


-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,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는지, 22개 위험발생 장소 여부 등 사안마다 법 적용에 논란 발생
-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, 시설 등의 위험에 지배관리권 있다면 **도급유형, 위험장소 여부** 등을 **불문**하고 책임 부과타당
-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직접 지시 시 불법파견 소지  
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/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

## 참고 사항

# 개별실적요율제 개편(유해 ·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)

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(안)(**산재보상정책과에서 법령개정 추진**)

 도급 금지(제58조, 제59조, 제60조)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하청 재해

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자 재해

 원청 책임(제62조, 제63조, 제64조, 제65조)이 있는 하청 재해

## 개정 사유(배경)

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유해 ·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를 위해  
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 
원청 또는 사용사업주의 **개별실적요율**에 반영 필요

# 업종 공통

##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(제63조)

### 개정 전(제29조)

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...<중략>...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..<중략>...

③ ...<중략>..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...<이하 중략>

### 개정 후(제63조)

도급인은 **관계수급인 근로자**가 **도급인의 사업장**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**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**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**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**는 제외한다.

## 업종 공통

#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개정(제64조)

 안전보건조치 외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규정(시행일 : 2020.1.16)

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 순회점검

 안전보건교육 장소·자료 지원, 수급인 근로자 교육 실시 확인

 정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,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

## 개정 사유(배경)

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가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정비하고  
실제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은 제125조에 도급인  
으로 일원화(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)

# 업종 공통

##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(제64조)

### 개정 전(제29조)

②...<중략>...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.

1.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...
  2.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...
  3. ...<중략>...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
  4. 작업환경측정
  5. ...경보운영 사항의 통보
- ...<이하 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64조)

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...<중략>...이행하여야 한다.

1. ...<중략>...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  2. 작업장 순회점검
  3. ...안전보건교육을 위한 **장소 및 자료의 제공** 등 지원
  4. ...안전보건**교육의 실시 확인**
  5. ...**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**
- ...<이하 중략>...

## 업종 공통

#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(제65조)

 형식적인 정보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(시행일 : 2020.1.16)

 해당 작업 시작 전, **문서**로 제공 의무(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)

 안전작업 수행여부 **도급인이 확인 의무**(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)

 정보 미제공 시 작업 연기 및 계약의 **지체책임 면제 명시**

## 개정 사유(배경)

➤도급인은수급인 근로자가제공정보에 따른 필요조치를 받고 작업 수행여부를확인할 필요가있는데 법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

➤도급인의 형식적인 정보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

(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/1천만원 이하의 벌금 )

## 업종 공통

#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(제65조)

### 개정 전(제29조)

- ⑤...<중략>...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...<중략>...
1. ...<중략>...제제를 제조 · 사용 ·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...<중략>...개조 · 분해 ·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
  2. ...<중략>...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  3.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...<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65조)

- ①...<중략>...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**문서**로 제공하여야 한다.  
...<중략>...
- ③**도급인**은...<중략>...**안전 · 보건 조치**를 하였는지를 **확인**하여야 한다.
- ④ 수급인은...<중략>...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인은 **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**

## 업종 공통

#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개정(제66조)

 시정조치 권한으로 변경(시행일 : 2020.1.16)

 시내 도급시 시정조치와 폭발 등 위험작업 시내외 도급시 시정조치로 구분

 시정조치 의무 → 시정조치 권한(이유: 도급인이 조치의무 부담)

 명령대상을 관계수급인/수급인만으로 규정(수급인 근로자는 제외)

## 개정 사유(배경)

-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 有
-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 시 **이중제재** 가능성(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업종 공통

##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(제66조)

### 개정 전(제29조)

⑥...<중략>...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...<중략>...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**하여야 한다.**

⑦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### 개정 후(제66조)


①도급인은...<중략>...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**관계수급인**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**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**조치에 따라야 한다.**

②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호의 작업을...<중략>...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**수급인**에게 그 **위반행위를 시정**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..<중략>...



## 업종 공통

#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개정(제110조)

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거 정비(시행일 : 2021.1.16)

 작성자를 양도 · 제공 → 제조·수입하려는 자로 변경

 MSDS기재 구성성분 : 유해 · 위험한 화학물질(국제기준과 동일)

 제제 → 혼합물,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→ 제품명으로 변경


## 개정 사유(배경)

- 제조 · 수입하여 직접 취급 시 MSDS작성의무가 제외
  - MSDS기재 구성성분은 유해·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입 화학제품은 국외 제조사가 제공한 MSDS에 미분류 물질 미기재된 경우 관련 정보 확보 곤란
- (MSDS 제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업종 공통

#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개정(제110조)

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부제출 의무(시행일 : 2021.1.16)

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 제출

 기재대상 제외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정보 장관에게 제출

 수입자가 미분류 물질 확인서 제출 시 별도 장관제출 면제

## 개정 사유(배경)

- MSDS를 양도·제공 받는자에게만 제공하므로 정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이 곤란
- 업무연관성 규명 등을 위해 MSDS 필요한 경우 거부하거나 휴 · 폐업 시 확보 곤란

(구성성분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업종 공통

#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(제110조)

### 개정 전(제41조)

①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
...<중략>... 양도하거나 제공  
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  
받는 자에게 ...<중략>... 제공  
하여야 한다.

1.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
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2.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
3.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
...<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110조)

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 
혼 합 물 로 서 ...<중략>... 제 조  
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...<중략>  
...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
제출하여야 한다...<중략>...

1. 제품명
2.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
3.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
4.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 
물리적 위험성  
...<중략>...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110조)

② ...<중략>...유해인자의 분류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한다. 다만, ...<중략>...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...<중략>...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**전부 포함**된 경우
2. 국외제조자로부터 ...<중략>...**분류 기준**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**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**를 받아 **제출**한 경우

## 업종 공통

#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개정(제112조)

 정보 비공개 시 사전승인 근거 마련(시행일 : 2021.1.16)

 명칭 및 함유량 비공개 필요성 등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

 비공개 정보 요구권자로 역학조사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추가

 사전승인 유효기간 5년(연장승인 유효기간도 동일)

## 개정 사유(배경)

영업비밀 기재 남용(09년 45.5% → 14년 67.4%)으로 노동자의  
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직업병 발생 위험이 상승

(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 등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전자회사 백혈병 사건  
가습기살균제 사건...

## 개정 전(제41조)

⑪...<중략>...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등...<중략>...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 
...<중략>...

## 개정 후(제112조)

①...<중략>...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...<중략>  
...대체할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.  
...<중략>...  
⑩...<중략>...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 
1. ~ 4. 생략  
5. 역학조사...<중략>...기관  
6.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

# 업종 공통

##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신설(제113조)

### ■ 국외제조자 보호장치 신설(시행일 : 2021.1.16)

-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, 구성성분 정보, 비공개 정보  
승인심사 등 필요자료는 국내수입자 같음 가능자 선임하여 제출
- 선임된 자가 제출된 MSDS를 해당물질 수입자에게 제공

### 신설 사유(배경)

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**제품복제**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판매중단 시 제품생산 차질 등 사회적 손실 동반 우려  
(국외제조자 거짓 수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113조)

① ~~국외제조자는~~ ···<중략>···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···<중략>···~~물질을 수입하는 자를~~ **가**임하여···<중략>···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···<중략>···MSDS의 **작성 · 제출**

2. ···<중략>···**확인서류의 제출**

② ···<중략>···~~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~~을 수입하는 자에게 **제공** ···<중략>···

③ ···<중략>···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**신고**하여야 한다.



 작업환경측정 의무 명확성 보완(시행일 : 2020.1.16)

 작업환경측정 의무와 작업환경측정기관 관한 사항 분리 규정

 수급인의 작업장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작업환경측정의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사항이 함께  
규정되어 복잡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

## 개정 전(제42조)

① ...<중략>... 근로자대표가  
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 
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
## 개정 후(제125조)

②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 
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 
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**도급인**이  
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 
하여금 **작업환경측정**을 하도록  
하여야 한다.

④ ...<중략>... 근로자대표가  
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 
근로자대표를 **참석**시켜야 한다.

## 업종 공통

#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 개정(제167조)

## ■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강화(시행일 : 2020.1.16)

■ 사업주 및 도급인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
(현행 도급인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
■ 형 확정 후 5년 이내 반복위반 시 형의 1/2까지 가중(신설)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중대재해 관련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고, 사망사고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서 발생
-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
(정부안: 10년 이하의 징역/1억원 이하의 벌금)

## 업종 공통

#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도급인 벌칙(제167조)


### 개정 전(제66조의2)

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개정 후(제167조)

-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...<중략>...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.

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시행일 : 2020.1.16)

 도급인: 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
(현행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유해·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작업장소,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 강화 필요
- 개정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조치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위반 시 제재도 강화 필요

(정부안: 5년 이하의 징역/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# 개정 전(제68조)

…<중략>…해당하는 자는 1년  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29조제3항, …<중략>…

## 개정 후(제169조)

…<중략>…해당하는 자는 3년  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
벌금에 처한다.

1. …<중략>…제63조

 **법인 벌금액 10억원 이하로 상향(시행일 : 2020.1.16)**

 **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적용**

 **법인(원·하청) 처벌수준 강화(1억원 이하 ➡ 10억원 이하)**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,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수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**벌금액이 소액**이라 형벌효과가 크지 않아 범죄억제의 효과가 미미

### 개정 전(제71조)

…<중략>…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…<이하 중략>…

### 개정 후(제173조)

…<중략>…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…< 중략>…

1. 제167조1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2.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: 해당조문의 벌금형



## ■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 가능(시행일 : 2020.1.16)

- 유죄 판결(선고유예 제외) 이나 벌금형 선고의 경우(6개월 이내 집행)
-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

### 신설 사유(배경)

- 현행 형법은 형 집행유예 선고시에만 수강명령 가능하여 산안법 위반자에게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시 수강명령 불가
- 산업재해의 피해,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 등 산재 **예방 목적**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강명령 신설 필요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174조)

① ...<중략>...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 (선고유예는 제외한다)을 선고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② 형의집행을유예...<중략>...집행 유예기간내에,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...<중략>...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, 징역형 ...<중략>...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.


# 제조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

## 제조업

## 공정안전보고서 개정(제44조, 제45조, 제46조)

 공정안전보고서 이해 쉽게 정비(시행일 2020.01.16)

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, 공정안전보고서 심사,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 등 단계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재배치

### 개정 사유(배경)

현행법(제49조의2)은 한 개의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

# 제조업

##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· 제출(제44조)

### 개정 전(제49조의2)

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 ...<중략>...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..<이하 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44조)

①사업주는 **사업장**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..<중략>...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**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**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...<이하 중략>...

# 제조업

##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(제45조)

### 개정 전(제49조의2)

③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를  
...<중략>...심사하여야 하며, ...  
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 
<중략>... 공정 안전 보고서의  
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④...<중략>...적합하다고 인정  
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 
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 
...<이하 중략>...

⑤ 사 업 주 는 ...< 중 략 >...  
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 
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 
갇추어 두어야 한다.

### 개정 후(제45조)

①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를  
...<중략>...심사하여 그 **결과를**  
**사업주에게 서면으로** 알려 주어야  
한다...<중략>...공정안전 보고서의  
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②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를  
**사업장에 갇추어** 두어야 한다.

# 제조업

##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(제46조)

### 개정 전(제49조의2)


- ⑥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⑦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을 지켜야 한다.
- ⑧ <생략>
- ⑨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### 개정 후(제46조)

- ①사업주와 근로자는...<중략>... **심사를 받은**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.
- ②...<중략>...공정안전 보고서 **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** 여부에 대하여...<중략>...고용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<생략>
- ④...<중략>...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## 제조업

##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(제58조)

 유해 · 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(시행일 : 2020. 1.16)

 도급작업, 수은 · 납 · 카드뮴의 제련 · 주입 · 가공 · 가열 작업  
허가물질 제조 · 사용 작업(베릴륨, 비소,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)

 전문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(장관 승인 필요) or 일시 · 간헐작업 제외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유해 ·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을 허용시 수급인의 **작업환경**  
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관리 지속 곤란으로 직업병 발생 등  
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**유해작업의 도급 금지** 필요  
(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)



# 제조업

##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(제58조)

### 개정 전(제28조)

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...<중략>...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을 줄 수 없다.

### 개정 후(제58조)

- ①...<중략>...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1. 도급작업...<이하 중략>...
  - ②...<중략>...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...<중략>...
    1. 일시·간헐적으로 하는 작업...
    2.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...<중략>...승인을 받은 경우
  -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.

## 제조업

## 도급의 승인 개정(제59조)

- 도급인가 대상확대 및 도급승인으로 변경(시행일 : 2020.1.16)
- 인가: 행정청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증하여 효력 완성
- 승인: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처분
- 지속적인 이행체계까지 확인(급성독성, 피부부식성 등 취급작업 대상)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유해·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·보수 등 작업 시 질식, 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장시간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을 유발

※ (예시) 황산·불산·질산·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하는 작업

# 제조업

## 도급의 승인(제59조)

### 개정 전(제28조)

- ②...<중략>...도급을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...<중략>...인가를 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안전보건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
### 개정 후(제59조)

- ①...<중략>...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**급성독성, 피부부식성**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**승인**을 받아야 한다...<중략>...안전 및 보건에 관한 **평가**를 받아야 한다.  
...<이하 중략>...

## 제조업

##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개정(제60조)

 승인받고 도급한 작업 하도급 금지(시행일 : 2020.1.16)

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

### 개정 사유(배경)

-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**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짐**
-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,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·보건관리가 불가능

# 제조업

##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(제60조)

### 개정 전(제28조)


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 
작업 중...<중략>...고용노동부  
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 
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(하도급을  
포함한다)을 줄 수 없다.

### 개정 후(제60조)

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 
...<중략>...연장승인 또는 변경  
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 
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 
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 
없다.

## 제조업

##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(제61조)

 적격 수급인과 도급계약 체결의무(시행일 : 2020.1.16)

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에 관한 필요한 **조치이행능력**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

### 신설 사유(배경)

- 최근 비용절감,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
-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·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 수급인 소속 노동자 보호 **사각지대** 발생

## 제조업

##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(제61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### 개정 후(제61조)


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
조치를 할 수 있는 **능력을 갖춘**  
**사업주에게** 도급하여야 한다.

## 제조업

#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(제161조)

 도급금지,도급승인,재하도급금지 위반시(시행일 : 2020.1.16)

 법정 한도액 **10억 이하 과징금** 부과

 고려사항(도급계약금액, 안전보건조치 이행 노력도, 재해발생 여부 등)

 도급인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

## 신설 사유(배경)

효율적인 업무수행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고, 형사적 제재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**경제적 제재**가 도급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



# 제조업

##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(제161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### 개정 후(제161조)

① ...<중략>...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1.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
2. ...<중략>...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
3. ...<중략>...재하도급한 경우

②...<중략>...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...<중략>...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급금액, 기간 및 횟수 등
2. ...<중략>...노력의 정도
3. 산업재해 발생 여부

# 건설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

## 건설업

##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(제67조)

 발주자의 예방조치 의무 부과(시행일 : 2020.1.16)

 (계획)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

 (설계)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시공사 제공

 (시공)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

### 신설 사유(배경)

발주자는 공사계획 · 설계 · 시공 등 **건설사업** **소 과정**에서 공사  
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단계부터  
산업재해 예방조치 고려 필요(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(제67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### 개정 후(제67조)

- ① ...<중략>...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...<중략>...
1. 건설공사 **계획**단계...<중략>
  2. 건설공사 **설계**단계...<중략>
  3. 건설공사 **시공**단계...<중략>
- ...<이하 중략>...



**법 시행 이후**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**계약을 체결**하는 경우부터 적용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개정(제70조)

■ 관계수급인도 공사기간 연장 요청(시행일 : 2020.1.16)

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→ 발주자 or 건설공사도급인

■ 그의 수급인 → 건설공사도급인 or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화

### 개정 사유(배경)

“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” “수급인” 이 지칭하는 자가 불분명(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(제70조)

### 개정 전(제29조의4)


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...<중략>...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...<중략>...
2.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

### 개정 후(제70조)

- ① **건설공사발주자**는...<중략>...
  1. ...<중략>...
  2. **건설공사발주자**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...<중략>...
- ② 건설공사의 **관계수급인**은 ...<중략>...**건설공사도급인**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**건설공사도급인**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**연장**하거나 **건설공사발주자**에게 그 기간의 **연장**을 **요청**하여야 한다.

##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명확화(시행일 : 2020.1.16)

 건설공사발주자: 도급계약 체결 시

 건설공사도급인: 사업계획 수립 시

(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제외)

 선박 건조 ·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: 사업계획 수립 시

### 개정 사유(배경)

“자체사업으로 하는 자”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선박  
건조 · 수리업종에 대해 별도 규정하여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  
(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(제72조)

### 개정 전(제30조)

①...<중략>...사업을 타인에게  
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 
하는 자는...<중략>...

1. ...<중략>...
2. 도급하는 자의...<중략>...

### 개정 후(제72조)

① **건설공사발주자**가 도급계약을  
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  
(**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**  
**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**)이  
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...<중략>  
④ **선박의 건조** 또는 **수리**를 최초로  
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계획을  
수립할 때...<중략>...**사업비에**  
**계상**하여야 한다.

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개정(제73조)

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(시행일 : 2020.1.16)

 건설재해예방지도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분리 규정

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도를 받도록 규정

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을 대통령령(시행령)으로 상향 입법

### 개정 사유(배경)

일정한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와  
관계없이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  
(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건설업

##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(제73조)

### 개정 전(제30조의2)

①...<중략>...산업안전보건관리  
비를 사용하려는 경우...<중략>...  
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
### 개정 후(제73조)

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**건설  
공사를 하는 동안**...<중략>...  
지도를 받아야 한다.

# 건설업

##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(제76조)

 타워크레인 등 원청의 안전조치 강화(시행일 : 2020.1.16)

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 
설치·작동되거나 설치·해체·조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
동 작업 직접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유해·위험방지 조치 **의무화**

### 신설 사유(배경)

T/C 임대업체, 설치·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안전  
관리에 취약하므로 원청에서 소 과정에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 
부담할 필요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/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 건설업

##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(제76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
### 개정 후(제76조)

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**타워크레인**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 등이 **설치**되어 있거나 **작동**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**설치·해체·조립**...<중략>...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건설업

## 타워크레인 설치 · 해체업의 등록 신설(제82조)

 타워크레인 설치 · 해체 등록제 도입(시행일 : 2020.1.16)

 등록한 자가 설치 · 해체작업 하도록 의무화



### 신설 사유(배경)

임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하여  
작업자의 숙련도가 낮고, 안전작업절차를 미준수하는 상황

(미등록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(미등록자 작업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# 건설업

## 타워크레인 설치 · 해체업의 등록 등(제82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### 개정 후(제82조)

-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...<중략>...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...<중략>... 등록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
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 · 해체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


# 기타사업 관련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



## 기타사업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신설(제77조)

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근거 마련(시행일 : 2020.1.16)

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·보건 조치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무 부과

### 신설 사유(배경)

비용절감 등 비전형 고용형태 확산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 
지위, 경제적 종속성(캐디, 플랫폼 종사자 등)으로 별도의 보호 필요  
(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  
(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77조)


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...<중략>...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...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**신입자해 예방**을 위하여 ..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...
2.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3.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②...<중략>...**안전및보건에 관한 교육**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기타사업

##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(제78조)

 이륜자동차 종사자 보호근거 마련(시행일 : 2020.1.16)

 중개하는 자의 이륜자동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\* 의무 신설

\* 예시) 과속배달(배달시간 제한) 금지 등

### 신설 사유(배경)

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음식 · 숙박업  
사망사고자의 대부분이 이륜자동차 사고

(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개정 전

<신설>

## 개정 후(제78조)

...<중략>...이동통신단말장치로  
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 
자는 ...<중략>...이륜자동차로  
물건을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의  
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 
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 
한다.

## 기타사업

#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(제79조)

■ 가맹본부 안전 · 보건조치 의무 신설(시행일 : 2020.1.16)

■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프로그램 마련 · 시행

■ 가맹본부가 공급 · 설치하는 설비 · 기계 등 안전보건정보 제공

## 신설 사유(배경)

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설비 · 기계  
· 원자재 등 **위험도 본부에서 제공**하므로 효과적인 산업재해  
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(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 기타사업

## 가맹본부의 산업재해예방 조치(제79조)

### 개정 전

<신설>

### 개정 후(제79조)

①...<중략>...가맹본부는...<중략>  
...가맹점의 설비나 기계, 원자재  
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 
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 
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 
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 
프로그램의 마련·시행
2. ...<중략>...공급하는 설비  
·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 
등에 대하여...<중략>... 안전  
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

## 참고자료

#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일정(안)



노·사·학계·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~3월)



하위법령 개정(안) 마련 및 입법예고(3월 말경)



규제심사 및 법제심사(5월~12월)



공포 및 시행(2020.1.16)



# 생명존중 안전일터 조성!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

